

민주화운동 관련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광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사업회는 2003년 11월부터 시행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실태조사연구' 결과를 지난 6월 공식 발표하였다. 이 조사는 사업회와 동국대 사회과학원이 함께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1970년대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분들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할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밝혀 향후 이들을 위한 사업 및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이 조사 자료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문서, 물건 등을 수집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로 활용될 예정이다.

애초 본 사업은 전국 단위의 조사로 기획되었으나, 예산 및 기초 사건의 내용과 실태 파악, 관련자들의 연락처 입수 등 어려운 현실적 조건들로 인해, 탐색 조사(pilot research) 차원에서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70년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로 그 대상을 제한했다.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70년대 관련자로 제한

이번 조사의 표집방법은 개량화 된 모집단(population)의 규모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과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을 병행하였다. 단 이들 방법이 비확률표

집(non-probability sampling)에 속하므로 이들로 부터 얻은 결과를 전체 모집단(여기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1970년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은 주의를 요한다.

전체적으로 본 조사에서 1970년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파악하고 접촉한 사례는 총 716사례이다. 이 중에서 276사례만이 응답하였고 440사례는 응답하지 않거나 응답하지 못 함(비응답 사례)으로써 응답률은 38.5%였다. 조사 대상자의 파악과 참여 여부의 확인 작업을 진행하면서 면접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제1차 조사는 2003년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이루어졌으며 26명의 조사원이 투입되었다. 제2차 조사는 연말연시의 시점을 넘긴 2004년 1월 7일부터 1월 20일까지 9명의 조사원에 의해 실시되었다.

이번 조사는 총 60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가지고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기입하고, 관련 활동 및 의견을 기록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은 가족사항 등과 관련된 기본 배경, 민주화운동 활동 영역, 민주화운동을 하게 된 계기 및 배경, 민주화운동 경력이 본인과 가족 등의 사회생활에 미친 영향, 현재의 사회경제적인 상황, 과거 투신했던 민주화운동에 대한 본인 및 주변의 평가, 현재 한국의 민주화 진척 정도에 대한 평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엇보다 이번 조사는 70년대 학생운동과 민주노조운동 등에 투신,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직접 설문 및 면접 조사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명망가들보다 주로 사회 저변에서 묵묵히 일하며 살고 있는 분들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도 특징적이다. 특히 청계피복, 동일방직, 원풍모방 등 민주노조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향후 학생운동, 민주노조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사회사, 미시사 연구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초의 직접 설문 및 면접 조사

이번 조사내용 중 특징적인 것을 소개하면,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위해 국가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명예회복(29%), 진상규명(28.6%), 보상(25%), 책임자 처벌(0.9%)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과거와 비교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은 상대적으로 줄고 보상 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운동가로서의 삶이나 대의명분으로부터 벗어나 현재 생활인으로서 살고 있는 이들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보상은 남성, 대학교 이상, 5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진상규명은 오히려 여성, 고등학교 이하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민주화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분야에 대한 질문 중 가장 높은 응답은 언론으로 유효조사 응답자의 3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치(22.35%), 노동(20.2%) 등의 순이다. 또한 민주화가 더 많이 요구되는 분야로는 정치(33.2%)가 다른 분야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노동(12.7%), 행정(12.7%), 언론(12.3%)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여기에서 정치, 노동, 언론 등 민주화가 많이 이루어진 주

요 분야가 동시에 더 많은 민주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분야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데, 이는 ‘민주화 이행’은 되었으나 그것이 공고화(consolidation)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포함한 이번 조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현재 삶의 모습과 기대, 지금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의 모습이 이들에게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민주화 이행’ 이후 공고화 되지 못한 현실 반영

그런데 이번 조사가 탐색조사(pilot research)였던 만큼 그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된 것은 어떻게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파악하고, 접촉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왜냐하면 이들과 접촉할 수 있는 체계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등 정부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기초 자료들은 관련자 여부를 심의 중이라는 이유로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어렵게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설문 대상자 스스로가 자신의 과거 활동과 현재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자체를 꺼려하여 설문에 선뜻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사업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과 미비점들을 최대한 보완한 후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본격적이고, 총체적인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조사는 다차원적인 비교 조사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즉, 민주화운동 관련자들과 보통 시민들의 삶의 모습을 비교·분석할 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삶의 모습이 성별, 부문운동별, 지역별, 학력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를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더욱 체계적인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을 진행시킬 예정이다.